

한-미 FTA 타결 이후 국회 및 정치권 동향과 한농연 대응활동 방안

한-미 FTA 타결 이후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비록 찬성 의원들의 숫자가 많지만,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농민·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뒤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회비준 일정과 대선에 미칠 영향, 한농연의 대응활동 방안을 알아보 고자 한다.

정파별로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분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여야 정치권은 입장 정리에 분주하다. 모두 ‘국익’이란 공통의 명분을 내걸고 있 지만 각 당, 각 대권주자별로 ‘셈법’은 제각각이다.

정 당	주 요 내 용
열린우리당	협상 타결 환영, 한미 FTA 보완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를 격려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음
한나라당	협상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 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4.2) FTA 비준 원하면 개헌, 정상회담 포기 촉구(4.3)
민주당	졸속 타결 유감, 국회 비준 과정에서 협상 내용 철저히 따질 것임.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안 되면 비준거부 운동 전개
민주노동당	한미 FTA 원천 무효화 투쟁 전개, 범국민 불복종 운동 전개, 국민투표 실시 촉구, 국회 차원에서 한미 FTA 청문회 실시, 국 정조사 실시 추진
국민중심당	협정 체결 불가피, 보완대책 마련
통합신당모임	양국 대표단 노고에 감사,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 속에서 국회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
민생정치모임	협상 타결은 국가적 불행,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 전개, 차기 정부에서 다시 추진

한나라당은 원칙적 찬성이지만 반대 여론을 감안하여 협상 결과 및 피해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5일 박의규 회장 및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비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 농어업 등의 피해를 꼼꼼히 따진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다소 불분명한 답변을 한 바 있다. 4. 25 재보선과 향후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농민·시민사회단체의 불편한 심기를 최대한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열린우리당 및 범여권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은 찬성과 반대가 혼재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비준 정국에서 보완 대책 마련과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여론을 남겼다.

천정배·김근태 의원 등이 한-미 FTA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범여권 세력 중 민생정치모임은 가장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또한 졸속 타결에 유감 입장을 밝혔으며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안 되면 비준거부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이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5월 2일 농해수위 청문회, “컴퓨터 모니터로 영문 협정문만 열람. 양허안은 비공개”

이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박홍수 농림부장관, 민동석 통상정책관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등 협상 관계자 19명을 지정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한농연 탁명구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10여명은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청문회 계획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정보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위원회는 현재 총 412개의 서류 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개 방침은 반쪽에 그치고 말았다. 영문으로 된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만 공개되며, 핵심 내용이 있는 부속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관세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비치할 예정”이며, “협정문에 대한 한미 간 문안조정 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과 협정문의 국문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비공개 열람은 향후 일부 문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협정문의 문구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라는 진단이다.

협정문 열람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협정문은 열람실에 비치된 컴퓨터 화면상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자는 수백 쪽의 영문 문서를 컴퓨터 화면으로만 볼 수 있지, 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열람실에는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 보좌관 1명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입회는 전면 금지된다. 더욱이 통상교섭본부는 30여 명의 ‘감독자’ 들을 열람실에 파견해 열람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협정문 공개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검찰에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정부의 비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결국 5월 2일 이뤄진 국회 농해수위의 청문회는, 이같은 정부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국회 농해수위는 5월 중순 청문회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채, 청문회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준 여부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 여론의 향배가 관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은,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즉 국회의원 296명이 100% 출석을 가정하면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4월 3일 한국일보의 잠정집계 결과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 숫자가 무려 117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별 한-미 FTA 찬반 의견 분포 (4월 3일자, 한국일보)

구분	찬성	반대	유보	답변거부·기타	계
한나라당	51	14	56	1	122
열린우리당	28	24	43	7	102
통합신당모임	2	4	15	1	22
민주당	4	5	1	1	11
민주노동당		9			9
국민중심당	1	3			4
무소속	2	7	2	1	12
계	88(31.2%)	66(23.4%)	117(41.5%)	11(3.9%)	282(100.0%)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일부 언론보도로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국민 여론은 비준동의 여부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너무 미국에 양보를 많이 했다”는 비판과 함께,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5월중 협상 원문이 국문 번역되어 검증이 시작되면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30%선에 올라 있으며, 개헌 및 국민연금법 등의 현안이 가닥을 잡은 만큼 당장의 돌발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4. 25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 나아가 여야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한-미 FTA는 하반기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세제 개편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김이 거센 상황에서, 의회는 미국 정부에 협정문의 일부 수정이 없이는 비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이 대선 주자들의 한-미 FTA 관련 입장을 조사한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노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단식농성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었다.

향후 한농연 대응 방향은?

한농연은 우선, 한-미 FTA 협상 중단에서 국회비준 저지로 국면이 전환된 상황이므로 협상 결과에 나타난 총체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찬성 여부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에 따라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농업 이외에도 의약품, 문화 분야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산업과의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생존권이 위협받자 거리로 나와 투쟁을 하였다. 이에 이번 한-미 FTA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힘있는 투쟁이 되려면 이해당사자들과의 연대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6. 20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 내 한농연 출신 농축협조합장은 물론 지방의원·단체장 등의 한-미 FTA 반대 결의문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국회 및 정치권에 한-미 FTA의 비준 반대 여론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회비준 저지 핵심 당사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농촌 지역구의 경우 반대가 우세한 편이지만, 일부 농촌 지역구 의원이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보다 조직화하여 지역구의원들의 대응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